

### 전북서 개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역 불만 없게... '연 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손본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손본다. 투자 계획 평가 시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는 지방으로 넘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제2국무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하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대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인 지난해 10월 7일 울산에서 열린 바 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일 중앙부처와 지방대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들이다. 안전별로 보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자문단 구성 중앙정부 권한 6개 분야 57개 과제 지방에 이양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을 바꿔 회의 운영 및 중앙부처의 안전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대협의회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 안전의 발굴·조정을 담당한다. 지방대협의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와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통칭한다.

중앙과 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단'을 꾸려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과 기금액 배분 기준은 보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

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 시·군·구(인구감소 지역 88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 시·도(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정한다.

이런 기금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 계획 평가 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 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에 공유해 내실 있게 평가한다.

또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경제·산업 22개 △국토·환경·해수 12개 △고용 8개 △복지·문화 7개 △교육 4개 △제도 4개이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일반산업단지 대상 스마트그린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단 관리 권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참여 확대,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 권한, 지식·벤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권한,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 렌터카 관련 등록 등 권한, 택시 등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특별 허가 등이 있다.

국토·환경·해수 분야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중앙토지사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업무, 지방항행비배후단지 개발 등 권한 마련

한 관리 권한 등이다. 고용 분야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 일자리 사업 수립·집행 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근로복지기금인 설립인가 및 관리·지도·감독,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권한, 기능대학 설립·경영 권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등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결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관광특구 지정요건 세부기준 규정, 대형골프장 지정 권한,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업 등록 등이다. 교육 분야는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등이다.

제도 분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평가체계 강화, 지방세 체납자 출구금지 요청기관 확대, 국유재산 개발·활용 시 지자체 참여 확대 등이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시·도 및 지방대협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지방대협의회가 제안한 방안으로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종합적인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한창섭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협력에 중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성공적인 지방사태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



제6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지난 1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홍 충남도지사, 박원우 경남도지사, 김명환 충북도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 “지방시대 실현”... 전국 시도지사들 한목소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전북서 개최... 지방의제 등 논의 김관영 도지사 “지역 행정수요 맞게 자치조직권 확대” 강조 아·태 마스터스 등 협조 요청에 시도지사들 “적극 협력” 화답

제6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 총회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지금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협의회 부회장으로서는 시도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오는 5월 13일 개최사에 시도지사님들께서 참석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그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참여에도 시도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전북민이 아닌 각 지역과 연계해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함에 따라 두 대회의 성공 개최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와 '2023 전북 아태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지난 2021년 8월에 조직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시 민원콜센터 등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9일 전주시 민원콜센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원콜센터는 전주시에 전화 연결시 시민들을 맞이하는 첫 목소리로 시민들의 문의 사항과 민원 해결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CCTV 관제센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질의응답을 마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CCTV통합관제센터와 민원콜센터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삼길 행정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4·5 전주를 재선거

## “경로당을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 김호서 예비후보 “생산적 여가 활동 개념으로 전환”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수용 시설’의 인식이 강했던 노년 여가·복지 시설을 ‘생산적 여가 활동’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노인복지 개선 실행계획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게 전제되고 있지만 노인 인구를 위한 여가시설 등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지역구 관내 60세 이상 노인은 모두 4만2822명으로 전주시 전체 노인인구(15만5578명) 가운데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인구대비 전체 노인비율인 28.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хла러 즐기고 있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만 98% 이상이 경로당에 치우쳐 있는데다 대부분이 모이는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지역내 노인들이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로당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최소 단위의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신·효자·심전 전주를 관내에만 100여개소가 넘는 경로당을 다른 사회 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강화된 최소 단위의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로당을 통해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규모와 시설 설비를 확대·확충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



##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만들 것”

### 임정엽 예비후보 “일자리·주거·복지 지원 통해”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무소속)가 지난 10일 ‘청년 행복도시 전주시’를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라는 큰 파도를 우리 청년들과 손잡고 함께 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전국 최하위 수준인 청년고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의 15~29세 청년고용률은 33.1%(2022년 4분기)로 전국에서 두 번째

로 낮고 전주(33.5%)는 전북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임정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책으로는 ‘신상주택’을 제시한 임 예비후보는 “시 소유의 원도심 자투리 땅 등에 15층 정도의 복합건물을 지으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복지공약도 꼼꼼히 챙겨, 면접비 지원(최대 5만원), 청년 문화 바우처 제공(연 20만원), 결혼·출산 파격 지원(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축하금 지원) 등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

